

제113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09.11.03(화)

< Q&A >

1. 고등교육의 발전에 대해 일본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시장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또한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문부와 학성이 아니라, 재정관련 부처가 되고 있는 것인가?
 -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발의와 승인과정은 문부과학성 (교육위원회)이 재무성에 건의한 후 내각과 수상에 의해 최종 결의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 제 역할을 다하는 학생을 육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형태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한국의 경우도 법인화하는 것이 옳은가? 법인화 이후 “감사”의 강화와 학비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인화 이후, 법인체로서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역시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이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법인화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은 한 차례 정도 인상되었으나 이는 사립대의 절반 정도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 중이다. 또한 대안으로 유학생을 증가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
3. 법인화에 따른 행정관리와 교육연구의 변화는 어떠한가? 동경대의 경우 지방대보다 법인화의 영향이 적은가?
 - 현재 연구자의 육성보다 전문가의 육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일본대학도 이 점에 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문부성보다는 산업성에서 주관하는 경향이 강하며, 최첨단, 세계수준의 연구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4. 법인화 이후 지식공동체에서 지식경영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맞는 것인가? 연구비배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나라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법인화 이후 정년의 확대 및 젊은 학자의 증가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관련 사회 문제가 단지 법인화로 인해 야기된 문제만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5. 국립대 중심의 법인화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사립대의 경우를 어떠한가? 또한 법인화 이후 직원처사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무리하게 학생수를 늘리는 것 보다 학부생들을 위해 새롭고 매력적인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대학을 고교의 연장선상에서 보아 교양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직원처사에 대해서는, 법인화 이후의 새로운 조직체제를 위해 적절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를 고안 중에 있다.